

푸틴 집권 4기 러시아의 동북아·한반도 정책과 한·러 외교·경협의 과제

서 동 주* · 이 상 준**

- 개요 -

본 연구의 목적은 푸틴 집권 4기 러시아의 동북아·한반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역내 국제정세 변화 속에 한·러 간 극동지역 외교 및 경협이 구체적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지정학 측면 못지않게 지경학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새로운 한반도 질서 구축에 도움이 되며 신북방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북한 비핵화와 대외개방 의지에 따라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관심이 증폭되는 가운데 한반도와 러시아 극동의 연계 방안이 장기적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때마침 푸틴 대통령은 집권 4기를 시작하였다. 대러 외교경제협력 정책은 남북관계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동해 나가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동참자로서 또 중재자로서 러시아의 역할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러시아는 자원판매 시장과 기술보유국으로서의 한국과 협력에 기대를 걸고 있다. 에너지와 물류의 허브 국가로 거듭나서 강대국으로서의 확고한 위치를 가지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러시아의 협력 수요를 활용하여 북한이 참여하는 남북러 3각 프로젝트 공동조사와 타당성 검토 작업이 선행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GTI 등과 같이 러시아가 적극 참여하고 작은 공간에서라도 실질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협력의 면을 넓히는 노력이 요구된다.

주 제 어: 푸틴, 러시아, 신동방정책, 신북방정책, 한반도 신경제구상, 남북러 3각 경협, 동방경제포럼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국민대학교 유라시아학과 교수.

1. 서론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회담 이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한국의 역대 정부는 남북문제가 교착상태에 빠졌을 때 유라시아 대륙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이전 정부의 경로의존적 유산을 물려받은 문재인 정부의 출발도 이러한 정책적 기조하에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가장 빠른 시일내 러시아를 방문하였고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북방경제협력위원회도 출범시켰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과 4.27 판문점 선언이 나온 이후 국제사회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남북관계에 집중되고 있다. 한국 기업의 입장도 그렇다. 남북 지도자의 판문점 선언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확인된 북한의 비핵화와 대외개방 의지에 따라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방경제권과의 경제협력은 좀 더 실현 가능하면서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될 필요가 있다.

때마침 푸틴 대통령은 금년 5월 7일 집권 4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집권 4기 대외정책은 지난 3기까지의 강대국 부활, 적극적 반서방주의, 뉴노멀 상태 하 국가안보 강화 등으로 특징되어지는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러시아 대외정책이 유럽, 중동, 유라시아, 동북아를 주요 공간적 배경으로 하면서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변적인 부분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의 이러한 구도에 상응하여 우리 역시 한반도 질서 재편 움직임뿐 아니라 유럽, 유라시아권이 포함된 국제정세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신북방정책을 동시적이면서 병렬적으로 연계하면서 또 독립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판문점 선언과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감안하면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완성을 위해서는 북방 경제, 특히 러시아 극동과의 연계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북방경제의 실현을 통해 동북아 지역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가능성을 점검하면서 역내 국가 간 상호의존성이 안보 위기를 점차적으로 줄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이후 한반도 안보정세가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 조응하여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이 순차적으로 실현

되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푸틴 집권 4기 러시아의 동북아·한반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역내 국제정세 변화 속에 한·러 간 극동지역 외교 및 경협의 구체적인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 글에서는 지정학 측면 못지않게 지경학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새로운 한반도질서 구축에 도움이 되며 신북방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우선 2장에서는 러시아 푸틴집권 4기의 출범 의의와 대외정책의 핵심을 파악해 본다. 집권 3기와 비교해 지속과 변화의 관점에서 집권 4기 푸틴정부의 대외정책 특징을 살펴보고 전망도 해 본다. 3장에서는 푸틴정부의 한반도 인식과 정책 방향에 대해 탐구한다. 이에는 러시아와 연계되어 있는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대러 정책도 포함해 파악해 본다. 끝으로 4장에서는 한·러 간 극동지역에서의 외교 및 경협 부문에서의 성과 제고를 위해 고려해야할 정책 방향과 방안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푸틴 집권 4기의 대외정책 현안과 방향

2.1 국제질서 재편과 대(大)유라시아주의(Greater Eurasianism)

푸틴정부의 대외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은 대외적으로 국제질서환경, 상대적 국가능력, 대외 안보 위협 인식, 대내적으로 푸틴 리더십, 국가비전과 목표, 국민 지지 등을 꼽을 수 있다. 최근 국제질서는 지정학의 귀환(return of geopolitics), 신냉전(new cold war), 세력전이(power transition)의 가시화, 뉴노멀(new normal), 초불확실성(hyper-uncertainty) 등이 핵심어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2014년 3월 우크라이나 위기를 계기로 촉발된 크림반도 병합 이후 이러한 경향이 더 두드러지게 가시화되고 있다.

푸틴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조응하고자 이미 집권 3기에 신군사독트린,¹⁾ 국

1) “Военная доктрин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утверждена Президенто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5 декабря 2014 г., № Пр-2976), Совет Безопасности РФ, <http://www.scrf.gov.ru/security/military/document129/>(검색일: 2018.09.17). 김성진 교

가안보전략²⁾, 대외정책개념³⁾ 등 일련의 외교안보문서를 재정립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푸틴 집권 4기의 대외정책은 일정 정도 3기의 연장선에서 지속성을 띤 가운데 전개될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그간의 변화과정을 먼저 살펴보면,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세계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자인 미국과 유럽에 외교역량을 우선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소련 해체 직후 옐친은 서방과의 협력을 선호하였다. 그러나 그에 상응하는 대접을 받지 못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개혁 초기 러시아에게 간절히 필요했던 금융적인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이다. 그 결과 러시아 국내 사정도 복잡하긴 했지만 국제적인 지원이 부족하여 개혁은 표류하였고 1998년 금융위기를 맞았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시장을 주도하는 경제체제로의 변화가 있었고 권력의 중심을 푸틴이 차지하게 된다.

푸틴 집권 이후 러시아는 냉전 이후의 국제질서에 대한 강대국 간 합의가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서방에 불만을 제기하였다. 냉전 이후 질서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였던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EU 사이에서 갈지자 행보를 보이던 우크라이나의 혼란 과정에서 소련 시기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 우크라이나로 편입되었던 크림을 지역 주민들의 찬반 투표에 의거하여 다시 합병하게 된다. 크림반도 병합 이후 러시아는 G8에서 축출되었고⁴⁾ 제재가 시작됨

수는 이 문서에서 대외 위협으로 ‘정통성 있는 정부 전복을 포함해 러시아 인접국에서 러시아의 이해를 위협하는 정책을 추구하는 레짐 설립, 외국과 그 동맹국의 기관 조직에 의한 러시아에 행하는 전복 작전을 새롭게 언급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밖에 크림반도 병합과 구소련 구성국에서의 색깔 혁명에 대한 러시아의 우려를 반영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성진(2018) 「러시아 안보정책의 변화」, 『슬라브학보』, 제33권 2호, 113-115쪽; 고재남(2017), 『제3기 푸틴정부의 신외교안보 전략과 실제』, 국립외교원 정책연구시리즈(2016-16), 1-54쪽 참조.

- 2) “Стратег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утв. Указом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31 декабря 2015 г. N 683), *Совет Безопасности РФ*, <http://www.scrf.gov.ru/security/docs/document133/>(검색일: 2018.09.17).
- 3) “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Утверждена Президенто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В. Путиным 30 ноября 2016 г., *Совет Безопасности РФ*, <http://www.scrf.gov.ru/security/international/document25/>(검색일: 2018.09.17).
- 4) 2018년 6월 캐나다에서 개최된 G7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를 다시 참여시켜야 한다고 제안하였으나, 러시아는 G8 복귀에 관심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러시아, G7 회의에 다시 복귀해야’(종합)”, 『연합뉴스』,

에 따라 냉전 이후 서방과 최악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러시아는 트럼프 정부가 출범할 당시 미·러 관계의 개선을 기대하였고 제재 해제 여부에도 관심을 가졌다. 미국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커넥션은 미·러 관계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기존의 동맹에 대한 시각이 크게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러 뿐 아니라 중·러, 러·일관계의 재설정도 중요한 사항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는 미국이 손을 놓고 있는 동안 시리아의 알 아사드 정부를 지원하였고 시리아 내전과 중동질서 향배는 러시아의 중동 진출과 관련되어 있으며 러시아의 주요 관심 사항이다.

서구와의 갈등으로 인한 보상차원에서 현재 러시아 외교정책의 중심은 유라시아 대륙정책에 있다. 이를 통해 21세기적 세계 경제와 세계 가치 체계의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면서 국가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찾고자 한다. 러시아의 대(大)유라시아 정책은 기본적으로 ① 모든 국가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존중, ② 정치적 다원주의에 대한 존중과 국가 발전 및 삶의 방식에 따라 자체적인 경로를 선택할 권리 보장, ③ 외부 간섭으로부터 독립되는 협력과 지원, ④ 문화 다원주의, 신앙 및 종교적 관용, ⑤ 새로운 군사력을 창출하거나 혹은 현존하는 군사 정치적 동맹 및 분열이 악용되어 나타나는 적대적 안보정책에 대항, ⑥ 환경오염 및 기후 변화 등 유라시아 대륙 및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위해 유럽 제도를 포함한 선진적인 제도의 활용이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진행되고 있다.⁵⁾

이를 위해 러시아는 유라시아 통합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또 이를 확대하고자 한다.⁶⁾ 그래서 러시아에게 가장 중요한 외교 대상은 소연방 시절 같은 나라였던 독립국가연합(CIS)이다. 이들 나라들과는 CIS 정상회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등을 통해 영향력을 지속시키고 지역 통합을 이루려 애쓰고 있다. 이와 같은 행보는 러시아가 유라시

2018.06.08.

5) Anna Kuznetsova(2017) “Greater Eurasia: Perceptions from Russia, the European Union, and China,” *RIAC*, 2017.09.01, <http://russiancouncil.ru/en/analytcs-and-comments/analytcs/greater-eurasia-perceptions-from-russia-the-european-union-and-china/> (검색일: 2018.05.30).

6) “유로-아틀란틱 공간에서의 러시아 대외정책”,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주최, 알렉세이 아르바토프, 나제즈다 아르바토프 초청 세미나 자료집, 2017.12.19.

아 공간의 통합과 협력 공간 확대의 주역이 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유라시아 대륙을 다시 통합하게 되고 통합에 참여하는 대상국을 구소련 영토 이전보다 넓은 범위로 확대하면서 이 지역과 이웃하고 있는 유럽, 중동, 아시아에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러시아와 중국이 참여하고 있는 상하이 협력기구(SCO)에 인도와 파키스탄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기로 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러시아의 대외정책이 수사적이고 실질적으로 러시아의 외교안보·경제적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야욕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없지 않다. 그리고 미국과 대립적인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적어도 현재는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고 있다. 또한 자본과 시장의 논리만으로 발전을 도모하기 어려운 러시아의 근외 국가들은 러시아의 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자국의 이해를 달성하려고 대외정책을 전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러시아 이외 다른 세력의 이해관계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권위주의 정치체제와 국가주도 경제구조를 가진 유라시아 주변국들이 미국과의 관계를 단기간에 개선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소련이 통제된 공간을 넘어서는 지리적 범위로 자국의 지정학·지경학적 지평을 다시 확대하고자 하는 러시아의 전략은 아직은 유효하다.

2.2 푸틴 집권 4기 출범과 대외정책 향배

푸틴 대통령은 2018년 3월 18일 대선에서 76.7%로 역대 최고 득표율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⁷⁾ 이번 대선은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이 여전히 많을 뿐 아니라 서방과의 갈등이 러시아 유권자들의 애국주의 정서를 최대화하였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⁸⁾ 무엇보다 냉전 이후 1990년대의 초라한 국가적 위상에 대한 국민들의 트라우마는 러시아 국민들의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있고 이는 푸틴에 대한 지지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공정성 문제에 대한 시비가 없지는 않지만 절차적 민주주의의 제도화를 통해 푸틴은 정치적 정통

7) “Результаты выборов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становление № 152/1255-7, ЦИК России, 2018.03.23, <http://old.cikrf.ru/analogue/prezidentskiye-vybory-2018/itogi-golosovaniya/>(검색일: 2018.09.03).

8) 이선우(2018) “푸틴 4기의 출범 및 향후 러시아 정치체제의 진화 전망”, 평화재단 콜로키움, 2018.06.08, 발표자료, 1쪽.

성을 획득하고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⁹⁾ 그래서 당분간 푸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¹⁰⁾ 특히 외교안보 분야에서 러시아 국민들의 푸틴체제 지지는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다.

푸틴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전인 3월 1일 발표한 연례 국정연설에서 사실상 선거공약이나 다름없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연설에서의 핵심은 두 가지로 집약된다. 하나는 2024년까지 즉 집권 4기 동안에 러시아를 국내총생산(GDP) 세계 5위로 도약시키고, 평균수명 연장, 복지 혜택 증대 등 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 시킬 것이라고 천명한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군사강국 러시아의 위상과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연설 중 45분을 할애하여 러시아가 개발한 새로운 각종 전략무기들을 소개하였다.¹¹⁾ 서방측이 추진 중인 MD체제를 뚫어낼 수 있는 신형 ICBM ‘사르마트(Sarmat)’, 핵 추진 순항미사일과 핵 추진 수중 드론, 극초음속 미사일 등이 시연되었다.¹²⁾ 결국 푸틴 집권 4기 러시아는 경제 강국, 군사 강국의 러시아를 이룩하겠다는 국정운영 의지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2018년 5월 7일 취임 직후 푸틴은 집권 4기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담은 ‘2024년까지 국가발전 목표 및 전략적 과제’를 발표하였다.¹³⁾ 대외정책 역시 이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푸틴 대통령은 집권 4기의 우호적인 국제환경 조성을 위해 러시아 변경 지역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구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서방측의 대러 제재 해제, 외교관 맞추방 공방 등 일련의 외교적 갈등은 좀처럼 실마

9) 장세호(2018) 「러시아 푸틴 집권 4기 대내외 정책방향」, 『INSS 전략보고』, 2018-02호, 6-7쪽.

10) 푸틴 대통령의 최근 지지도는 2018년 6월 발표한 연금개혁안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여전히 그 기반은 단단한 것으로 평가된다.

11) “После Президента Федеральному Собранию”,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2018.03.01, <http://www.kremlin.ru/events/president/transcripts/messages/56957>(검색일: 2018.09.25). 차세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엔진 장착 순항미사일과 수중 드론, 극초음속(음속의 5배) 미사일 등 각종 첨단 무기들이 소개되었다.

12) 관련 동영상은 “푸틴이 공개한 러시아 차세대 슈퍼무기 6종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dQsopGg0Vy0>(검색일: 2018.09.25) 참조.

13) “Президент подписал Указ «О национальных целях и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задачах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24 года»”, 2018.05.07,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http://kremlin.ru/acts/news/57425>(검색일: 2018.08.20).

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는 미·러 갈등이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 그치고 있다.

러시아는 미·중 간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국제질서 재편을 원하고 있다. 실제 러시아는 아시아 중시 정책과 극동개발을 통해 아태지역 관문 국가인 한·중·일의 관심을 끌어들이고 또한 대(Greater)유라시아 정책을 통해 동서뿐 아니라 남북으로 협력 공간을 팽창하고자 한다. 유라시아 경제연합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통합관세행정 체제를 도입하여 근린 지역의 결속을 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현실적으로 경제사정이 어려운 가운데 대유라시아 파트너십을 내걸어 터키, 시리아에서 나름 성과를 거두었다. 뿐만 아니라 동유럽 일원, 조지아,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등으로 협력관계를 확대하였다. 미국 대외정책의 잭슨주의 환원(미국 국력, 위상 중시, 타국 정치 무관심, 위협에는 강한 응징)으로 인해 공백이 생기는 지역을 중심으로 러시아는 입지를 강화하였다. 동시에 중국이 추구하고자 하는 일대일로에 대한 부분적인 통제를 통해 러시아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유리한 국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러시아의 “대유라시아 동반관계”에 참여할 수 있는 국가들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문제가 많으며, 이들 국가 간 정치경제 시스템의 차이가 커서 유효한 협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러시아는 이와 같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SCO에 인도와 파키스탄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였고 이란도 SCO에 가입시켜야 한다고 중국을 설득하고 있다. 물론 SCO에 새로이 가입한 인도와 파키스탄 등과 비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협력을 추진한다면 SCO를 확대한 것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렇지만 러시아는 이를 통해 유라시아 대륙에서 외교안보의 플랫폼을 조직하고 중국의 영향력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러시아는 SCO를 통해 러시아·인도·중국의 3각 협력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려고 한다.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러시아는 중국 딜레마를 가지고 있다. 러시아 카네기 연구소의 드미트리 트레닌 박사는 중국이 러시아와 에너지 및 국방 분야에서 진행하고 있는 현재와 같은 구도의 협력에 만족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영향력이 더 이상 커지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는 점과 중국과 미국 사이 갈등이 발생할 경우 러시아가 중국을 전적으로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양국 관계는 현재의 모습에서 더 이상 발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다.¹⁴⁾

러시아는 중국 딜레마를 일정 부분 해소하기 위해 유라시아 경제연합

(EAEU)과 일대일로로의 조화를 추구하는 가운데 ASEAN과의 협력을 확대하고자 한다. ASEAN의 경제적 규모가 중국에 미치지 못하지만 중국 경제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소련시기 중요한 파트너였던 베트남을 관문(gateway)로 삼기 위하여 EAEU·베트남 간 FTA를 체결하였다.¹⁵⁾

한편 러시아는 대유라시아 전략의 목표가 다소 유토피아적인 것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협력을 위해 재정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인 협력은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러시아와 유라시아 국가 간 공통적 이해관계가 있는 테러 척결, 급진 이슬람과의 싸움 등 외교안보적인 측면을 우선적으로 감안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러시아는 경제적 측면에서 재정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다자 관계보다 양자 관계를 선호하고 있다.¹⁶⁾

그러나 전통적으로 러시아 외교의 중심이 유럽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다. 분열된 우크라이나와 분열된 EU가 러시아 외교의 우호적 국제환경에 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조건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러시아는 UN 질서 이외의 국제 이슈 해결에 있어 자국의 위상을 다시 회복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G8로 복귀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미국, 중국, EU(혹은 독일)와 더불어 G4(내심 G3 희망)까지 러시아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노력은 중요한 국정과제일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 없이도 미래성장 동력 확보가 어렵지 않다고 하지만 금융, 기술의 접근에 있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 정치인들과 미국인들이 선거로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에 존경심을 표하여야 한다는 등 미국 정부에 계속적으로 화해의 손길을 보내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된다. 푸틴 대통령은 집권 4기를, 러·미 관계를 개선하는 신데탕트 시기로 국면을 전환할 가능성도 있으며 극동개발에 한국, 일본을 적극 참여시키기 위해서도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물론 유럽

14) Dmitri Trenin(2015) “From Greater Europe to Greater Asia? The Sino-Russian Entente,” *Carnegie Moscow Center*, 2015.04.09, <http://carnegie.ru/2015/04/09/from-greater-europe-to-greater-asia-sino-russian-entente-pub-59728>(검색일: 2018.05.20).

15) Gleb Fedorove(2017) “TPP failure: Can Vietnam become Russia’s window to Asia?,” *Russia Beyond*, 2017.01.17, https://www.rbth.com/business/2017/01/31/tpf-failure-can-vietnam-become-russias-window-to-asia_692768(검색일: 2018.05.20).

16) 바실리 미헤예프(2018) “푸틴 4기 러시아의 대외정책과 한반도”, 한국외대 강연 원고, 2018.03.20.

스파이 사건으로 불거진 외교관 추방 등으로 당장 관계가 급속도로 개선될 수 있는 명분을 또 잃어버리기는 하였지만 러시아의 외교안보의 사활적 이익이 유럽과 중동에 있다는 점에서 동북아에서는 다소 유연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러·중 관계는 1996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맺은 이후 역사상 최고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올 6월 상하이 협력기구 참석을 위한 중국을 방문한 것을 포함하여 이미 수차례 정상회담을 추진하였다. 시진핑 주석과 회담하고 러·중 전략적 동반자관계가 공고함을 대내외에 과시하였다. 이로써 역내 질서 재편의 움직임 속에 미·일동맹 강화에 대응하는 세력균형 구축의 일환으로 러시아는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 동시에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경계하고 있다. 러·중 관계가 역사상 최고의 수준에 있지만 러시아가 중국과 정치·군사적 동맹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다.

3. 푸틴정부의 한반도 인식과 정책 방향¹⁷⁾

3.1 한반도 인식과 신동방정책

전반적으로 러시아는 한반도 이슈를 다른 지역 외교안보 현안과 비교하여 후순위로 두고 있다. 이는 러시아가 직면하고 있는 냉정한 국제정세의 현실을 감안하였기 때문이다.

미국 및 EU와의 갈등이 커지면서 러시아는 동북아·한반도를 유라시아 지역의 한 축이자 전략적 요충지로 중시하기 시작하였다. 러시아는 동북아지역을 ① 세력균형의 유라시아 연대망 구축, ② 지경학적 협력과 투자 유인, ③ 포괄적 외교 수단으로서 에너지 자원 활용 전략의 대상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¹⁸⁾ 이를 위해 과거 옐친과 달리 푸틴은 남북한 모두와 수교를 한 국가로서 외향적으로 균형 접근 및 등거리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러시아의 한반

17) 본 챕터는 이상준·서동주(2017) 「한반도를 둘러싼 러시아의 인식과 입장」(여시재 이슈브리프, 2017.06.15)의 내용을 정리 보완하는 것을 밝힌다.

18) 서동주(2009) 「러시아의 동아시아 전략과 미래의 역할」, 『러시아의 미래와 한반도』, 고재남·엄구호 엮음, 파주: 한국학술정보, 375-376쪽.

도에 대한 관심과 정책은 세계전략, 유라시아전략, 아시아태평양, 동북아로 이어지는 일련의 외교안보 추진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고 있다.

현재까지 푸틴정부는 실용적 신전방위 강대국 노선의 대외정책 기조를 견지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체제전환 직후 몰락했던 러시아가 아니라 강대국으로 부활했다는 인식을 갖고, 보다 적극적이며 공세적으로 국제현안에 개입하는 등 국익 증진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포브스(Forbes)지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위로 푸틴대통령을 선정한 것은 러시아의 대외정책이 일정 정도 국제사회에 영향을 끼친 결과이다. 실제 동 기간 크림반도 병합, 시리아 내전에의 군사적 개입, 이란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의 주도적 역할, IS 등 국제테러리즘과의 전쟁 수행 등 국제무대에서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과 존재감은 서방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특히 2014년 3월 크림반도 병합 이후에는 서방측의 대러 제재 상황과 맞물려 소위 푸틴독트린을 내세우며 외교적 난관을 돌파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¹⁹⁾ 그래서 지금은 유럽 쪽에 치우쳤던 외교적 관심을 넓혀 극동시베리아 지역을 보다 강조하는 러시아판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신동방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내각에 극동개발부를 신설한 것은 물론이고 2012년 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였다.

매년 푸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주관하고 있는 동방경제포럼은 푸틴의 극동개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중요한 행사가 되고 있다. 2017년 9월에 개최된 동방경제포럼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석하는 등 규모와 위상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올해 2018년에는 특히 시진핑 주석이 처음 참석하여 러시아 언론의 관심을 받았고 남북러 3자가 참여하는 패널도 구성되었다.²⁰⁾ 푸틴 정부는 이번 동방경제포럼에서 극동개발계획을 수정 보완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극동시베리아 지역 개발과 발전에 대한 연방 차원의 높은 관심과 지원을 거듭 강조하였다.

러시아 대통령실 산하 싱크 탱크 러시아전략문제연구소(RISS)의 미하일 프

19) 장덕준(2015) 「‘신 푸틴 독트린’과 러시아 대외정책의 향방」, 『Russia Eurasia FOCUS』, 제 304호.

20) 2018년 9월 11~13일간 개최된 동방경제포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동주(2018) 「2018 동방경제포럼: 러중일 정상 회동과 국제정치적 함의」, 『INSS Issue Brief 18-39』 참조.

라드코프(Fradkov) 소장은 작년 한국 대통령의 선거 결과를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하였다.²¹⁾ 하나는 한국 국민들이 북한문제 해결에 있어 대화, 평화적, 외교적 해법을 지지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사드 배치와 비용 분담 요구, FTA 개정 논의 등 미국의 대한(對韓) 정책에 이견이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하였다.²²⁾ 러시아전략문제연구소는 크렘린과 연계된 전략 싱크탱크로서 러시아 대외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연구기관이라는 점에서 프라드코프 소장의 이러한 평가는 러시아 나름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 정도와 한반도 현안에 대한 인식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 선거 직후 푸틴 대통령은 한국의 신정부 출범과 관련하여 2017년 5월 10일에는 축전을, 12일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하였으며 이례적으로 대리 특사단을 직접 접견할 것이라고 바로 약속도 하였다. 과거와 달리 러시아 정부는 한국 선거 결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신정부에 호의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다. 러시아는 정책적 정합성 측면에서 한국의 보수정부보다는 진보정부를 더 선호하였는데 이러한 점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제3차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양국 간 극동시베리아지역 개발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장차 가스관 건설, 철도망 연결도 진전시켜 나갈 것임을 밝히는 등 나인 브릿지+α를 제시하면서 러시아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8년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를 국빈 방문하고,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TSR, TKR 연결사업, 나진-하산 물류사업, FTA 협상 등 양국 경협 사안과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제1차 한·러 협의회 및 제2차 한국 투자자의 날 행사도 개최된 바 있다.²³⁾ 한국의 신북방정책과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간 상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 노력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²⁴⁾ 이러한 추세는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 이후 개최된 한·러 정상회담에서도 계속 이어가고 있다.

21) Российский Институт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www.riss.ru.

22) M. E. Фрадков(2017) “Директор РИСИ М.Е. Фрадков о выборах президента Южной Кореи”, *РИСИ*, 2017.05.09, <https://riss.ru/events/40707/>(검색일: 2017.07.16).

23) “‘한·러 협의회’ 출범... ‘9-브릿지’ 사업 협의채널 가동”, 『연합뉴스』, 2018.03.05.

24)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 전략과 과제”, 2018년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공동학술회의 자료집(2018.05.11), “신북방정책과 신동방정책: 현실적 접점 찾기”,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자료집(2017.12.22) 참조.

3.2.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입장과 관심사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관심과 대외정책 목표를 단순화하기는 쉽지 않다. 그 래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극동시베리아 개발을 위한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 안보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이다. 또한 남북한 동시 수교국으로서 북핵문제, 사드 배치, 평화체제 구축 등을 포함해 한반도 안보 현안의 당사자로서 의 참여와 영향력 제고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러시아가 포함될 수 있는 6자회담의 유효성을 강조하고 이의 복원을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러시아가 6자 회담 형식을 강조하는 이유는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아직까지 아 태지역에서 러시아의 전략적 지위가 역내 다른 강대국과 비교할 때 약하기 때문이다. 러시아 입장에서 6자회담 형식은 동북아지역에서 러시아의 부담을 덜고 개입은 증진시킬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 개입구조이기에 유용한 수단이다.

러시아 외교부 싱크탱크 러시아국제관계위원회(RIAC)의 안드레이 코르투 노프(Kortunov) 박사는 러시아는 한반도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 을 중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²⁵⁾ 첫째, 다자적 접근 방식의 지지로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접근 방식에 있어 공통분모를 찾아 야 하며 6자회담이 그러한 논의의 장이 되어야 한다. 둘째, 북한이 핵을 포 기하도록 하는 대신 다자적 안전보장을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평화협정 도 하나의 해결방식이며 북핵 프로그램을 한반도 비핵화와 연계해서 생각해 야 한다. 셋째, 개발의제와 안보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러시아, 중국 그리고 남북한을 연결시키는 에너지, 교통, 농업 등 다자 경제 협력 프로젝트를 정치적인 이유로 진행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 고 있다.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장기적으로 정치적 위험을 오히려 감소시킬 것이므로 경협과 안보사안이 함께 다뤄져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을 좀 더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둘째, 남·북·러 3각 경협 실현과 한·러 경협 증진 및 극동개발 투자 유치; 셋째, 한반도 비핵화와 6자회담에서의 러시아 역할 지속 및 강화; 넷째,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확산 저지; 다섯째, 남북한의 반러시아화 방지 및 한반도에의 영향력 제고 등이다.²⁶⁾ 또한 군사적 측면에서 한국내 사

25) “2013 Eurasia Initiative: Global Cooperation in the Era of Eurasia(유라시아 시대의 국제협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최, 컨퍼런스 발표 자료집(2013.10.18), 25쪽.

드(THAAD) 배치에 반대 입장도 견지하고 있다. 특히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러시아는 ① 북한의 핵보유 불용, ② 한반도 비핵화 지지, ③ 군사적 해법 불가 및 정치적·외교적 해법의 강조, ④ 조건 없는 6자회담의 재개, ⑤ 북한과의 선린우호관계 발전 도모하 북한의 핵 포기 결정 유인 등을 내세우고 있다.²⁷⁾ 전체적으로 러시아는 한반도와 관련하여 남북한과 동시에 정상적 관계를 유지하는 입장을 지니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러시아의 대(對)남북한 균형 접근 및 등거리 정책도 변함없이 지속해 나가고 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전략적·외교적 입장은 미·중·일 여타국과 비교해 공통점도 있지만 러시아 고유의 특성도 담고 있다. 먼저 러시아는 역내 안보현안의 당사자로서 소외·배제되지 않고 참여하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과거 4자회담에서 소외된 경험을 외교적 실패 사례로 되새기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러시아는 한반도의 문제를 세계질서, 동아시아 질서 재편의 연장선에서 파악하고 있으며, 미·일 동맹에 대응하는 다른 축으로서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심화·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체제 붕괴가 아닌 안정 유지에 중점을 두는 동시에 극동시베리아 개발을 위한 우호적이고 평화적인 환경을 만드는 데도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체제 출범 초기에 주변국이 북한 지도부 체제를 흔드는 데 나서지 말기를 강조하는 등, 북한 지도부의 안보 불안 인식을 염두에 두고 협상을 통한 국면 해결 방식을 제시한 바도 있었다.²⁸⁾ 이 밖에 러시아는 남북한 균형 접근, 등거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남북한을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략을 구사하는 데도 유리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한러 수교 직후 서방과의 관계와 연동하여 친한국 일변도의 외교 추진과 그에 따른 실망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전략적 중간자의 입장에서 남북 간 대립, 긴장을 우려하고 대화를 촉구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실험, 한·미 연합군사훈련 등에 대해서는 양비론적 입장을 견지해 러시아의 존재감과 전략적 운신의 폭

26)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홍완석(2001) 「푸틴시대 러시아의 신한반도 전략」, 『한국정치학회보』, 제35집 제3호, 343-363쪽; 양정훈(2018)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 소고와 전망 연구」, 『한국공공관리학보』, 제32권 제3호, 187-208쪽; 신범식(2013) 「푸틴 3기 러시아의 한반도정책: 변화하는 동북아에서의 적극적 역할 모색」, 『한국과 국제정치』, 제29권 제1호, 123-161쪽 참조.

27) “Россия и меняющийся мир”, *Московские Новости*, 2012.02.27.

28) “Россия и меняющийся мир”.

을 넓히려고 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런 가운데서도 통일한국 출현에 긍정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으며, 성격 면에서 ‘비핵·비동맹·중립의 통일한국’ 출현을 선호하고 있다. 통일 방식에 대해 러시아는 평화공존의 원칙하에 남북한 협상을 통한 평화적 통일을 지지하고 있다. 즉 러시아는 한반도의 평화적, 민주적, 자주적 통일을 지지하고, 통일의 과정이 이해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평화적·단계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2013년 11월 푸틴 대통령이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통일은 당연한 과정이지만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양측의 이익을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²⁹⁾고 언급한 데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한편 러시아는 극동시베리아 개발 성공을 통해 중국의 중앙아, 극동지역 영향력 확대와 부상을 경계하는 한편, 남북을 함께 엮는 남북러 3각 경협을 성사시키는데 깊은 관심을 지니고 있다. 즉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를 활용하고 또 조성하기 위해 남북러 3각 경협의 실현 등 경제적 실익을 도모하려는 정책 의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를테면 북한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러시아가 끝까지 예외조항을 넣어 관철시켰던 것이 나진~하산 물류 프로젝트였다.³⁰⁾ 러시아는 한국의 나진~하산 물류 프로젝트의 잠정 중단 등 대북 제재의 여파로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래서 이 사안은 현재 한러 관계 발전의 잠정적 장애요인으로 남아있는 상태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러 외교경제협력 정책은 남북관계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동해 나가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동참자로서, 중재자로서 러시아의 역할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4.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정책 제언

4.1. 러시아의 한러 경협에 대한 인식 적극 활용

러시아가 한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하려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러시아의 세

29) “푸틴 “남북통일, 평화적 방법이면 지지””, 『중앙일보』, 2013.11.13.

30) “러시아 석탄 北 거쳐 반입... ‘나진-하산 프로젝트’ 재추진되나(종합)”, 『연합뉴스』, 2018.07.12.

계전략, 유라시아 전략, 아시아태평양전략에서 찾을 수 있다. 러시아의 아태 지역 진출과 극동개발은 이 지역의 풍부한 자원을 아태지역으로 수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이를 극동에 투자하여 국내적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외적으로 아태지역에서의 러시아의 입지를 높이려는 것이다. 러시아의 전통적인 에너지 시장인 유럽은 새로운 에너지 믹스(energy mix) 전략을 통해 화석연료의 비중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려 한다. 그래서 러시아는 새로운 에너지 판매시장을 확보해야 한다. 한중일 3국이 세계 에너지의 상당부분을 소비하고 있지만 에너지 자급률은 낮고 에너지 생산지와 거리도 멀어 에너지 시장에는 아시아 프리미엄이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 에너지 판매처의 다변화 대상지역으로서 극동과 인접한 한중일 3국은 매력적인 시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매력도 있지만 한·중·일 3국 가운데 한 국가에 에너지를 판매할 경우 가격 협상력 등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한·중·일 3국이 서로 경쟁을 하는 소비시장이 되는 것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을 경유하여 최종소비지를 한국으로 하는 가스관 연결 사업은 러시아 국익에 부합하는 좋은 프로젝트이다. 하지만 북핵 위기로 촉발된 대북 제재로 인해 북한을 경유하는 남·북·러 가스관 연결 프로젝트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래서 한때 푸틴 대통령은 한국이 원한다면 동해를 거쳐 가스를 공급할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과거 우크라이나와의 갈등으로 2006년, 2009년 두 차례 유럽향 천연가스 공급이 중단된 이후 러시아도 천연가스 경유국 위기를 회피하기 위하여 러시아에서 발트해를 경유하여 독일로 천연가스를 직접 공급하는 노드스트림을 건설한 경험이 있다.³¹⁾ 동해를 통해 가스관을 연결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북한 핵문제 해결 차원에서 남·북·러 가스관 연결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가스관을 북한을 경유하여 육상으로 연결할 경우 가스관 연결과 동시에 철도 연결과 전력망 연결을 동시에 진행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당연히 러시아는 북한을 경유하여 3대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러시아 국익에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과거 북핵 위기로 인해 3대 프로젝트의 성사가 무산되면서 러시아의 기대는 크게 훼손되었다.

31) “미 제재 경고 불구 ‘노드 스트림 2’ 가스관 공사 강행”, 『연합뉴스』, 2018.08.31; 주벨기에대사관(2016) “[에너지정책] 노드 스트림 2 프로젝트 관련 EU 집행위 입장”, 2016.05.04.

그런 경험으로 인해 러시아는 북한을 엮어서 3자협력을 희망하지만 여기에만 몰두하지는 않는다. 러시아는 극동개발을 위해 한·중·일 3국의 핵심적인 이익을 구실로 삼아 한·중·일 3국 간 협력보다는 경쟁을 부추기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일본과는 쿠릴열도 반환과 관련된 협상을 매개로 일본의 극동개발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우리와는 북한 이슈를 매개로 협력을 유발하고자 한다. 최근 북한 외채를 90억불 탕감하고 나진~하산 철로를 복원하는 등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면서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북핵 위기로 인해 한국과의 협력이 지지부진하는 사이 러시아는 아베와 북방영토 문제를 두고 관계 개선을 시도하였다.³²⁾ 러시아가 역사상 가장 가까운 중국을 놔두고 극동개발에 한국과 일본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은 극동개발에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시도이며 동시에 아태지역에서 한미동맹, 미일동맹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과의 대립구도를 약화시키는 목적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러시아 유럽지역에서 한국 기업의 투자 및 현지화 노력에 대해 높이 평가하지만 모스크바는 이미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모스크바 등 대도시에서 거두어들이는 성과와 같은 투자를 극동에서도 기대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 당국자들은 한국기업들이 인프라에는 투자하지 않고 과실만을 챙긴다고 인식하는 원인도 극동에서의 소극적인 투자로 인한 것이다.

이처럼 극동개발에 한국의 참여를 독려하는 이유는 극동개발에 필요한 자본의 1/4만을 정부예산으로 충당하게 됨에 따라 나머지 3/4의 자본은 외국으로부터 유치해야만 극동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이러한 자본을 한·중·일 그리고 아세안 국가로부터 유치하고자 한다. 푸틴 대통령이 참가하는 동방경제포럼은 매년 9월에 개최되고 있으며 포럼을 통해 극동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한·중·일을 비롯한 아태지역 국가에 소개된다. 또한 지난 1년 동안 극동지역 개발에서 거두어들이는 성과를 홍보하고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는 장으로 만드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6년 푸틴 대통령은 동방경제포럼의 기조연설에서 극동개발을 위해 ① 전력·에너지 연결에 의한 역내 에너지 슈퍼링 구축, ② 교통 인프라 건설 및 유라시아 운송로 역할 강화, ③ 디지털 경제 공간 구축, ④ 루스키 섬 국제학술·교육 및 기술 클

32) 박정호·강부균·민지영(2017) 「러·일 경제관계 진전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17-19호; “아베 일 총리 ‘동방경제포럼’ 참석... “평화협정 진전 희망””, 『VOA 뉴스』, 2018.09.04.

러스터 조성 이렇게 4가지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³³⁾

이러한 분야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를 원하고 있기에 위에서 제시한 분야에서 러시아는 한국기업이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최근 한국정부와 연해주정부가 공동으로 KSP 프로그램을 통해 제주도를 벤치마킹하여 루스키섬 개발 컨셉을 마련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 있다.³⁴⁾ 또한 극동개발이 자원 수출에만 국한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비자원 중소중견기업의 아태지역 시장 진출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편 소련시기부터 러시아가 가장 경쟁력을 가진 산업분야는 방위산업이었다. 에너지 분야는 글로벌 시장의 자원가격 변동에 의해 이익이 결정되었지만 방위산업분야의 기업들은 미국과의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현재 러시아는 미국과 함께 세계 무기 시장을 거의 양분하고 있다. 2012~16년 간 미국은 471억 6천 9백 달러로 33%를 차지하였고, 러시아는 331억 8천 5백만 달러로 23%를 차지하고 있다.³⁵⁾ 그런데 그동안 진행되었던 불곰사업 등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들이지 못하여 방위산업 분야에서 한-러 협력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국영항공공사와 국영조선공사를 설립하고 이 분야에서 협력을 통해 보다 경쟁력 있는 민간 항공기와 선박을 만들기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첨단 분야의 협력도 모스크바 등 서부 러시아 보다는 극동에서 진행하기를 원하고 있다.

현재 하바롭스크에서는 수호이 제작 공장이 있으며 블라디보스톡 인근 볼쇼이 카멘에는 즈베즈다 조선소가 있다. 러시아는 극동개발의 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자에게 많은 세제상의 혜택을 제공하는 선도개발구역을 지정하여 투자를 유치하고자 한다. 러시아 정부는 하바롭스크 수호이 공장과 볼쇼이 카멘 조선소가 위치한 지역을 선도개발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작년 9월 우리 정상의 동방경제포럼 참석을 계기로 즈베즈다 조선소 현대화와 관련된 협력사업에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을 참여시킨³⁶⁾ 이유는 다가

33) “Eastern Economic Forum,” *President of Russia*, 2016.09.03, (푸틴 제2차 동방경제포럼 기초연설문), <http://en.kremlin.ru/events/president/news/52808>(검색일: 2018.09.25).

34) KOTRA(2018) 『2016/17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산업·무역 정책자문. 러시아 연해주: 루스키섬 개발 전략 및 투자 유치 방안』, <http://www.ksp.go.kr/kr/publication/policy.jsp?year=&snat=&skey=&stem=&stype=&pg=1&idx=15086>(검색일: 2018.09.25).

35) SIPRI(2017) *SIPRI Yearbook 2017*,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 364.

오는 북극개발 시대에 필요한 LNG 탱크선, 쇄빙선 등 특수선박 건조에서 한국의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극동에서 얻는 자원과 수산물을 한국 기업이 단순하게 수입해 가기 보다는 러시아 현지에서 가공하여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해가기를 원하고 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자국 수산물 대부분이 선상 수출로 이뤄지며, 정작 자국 국민이 질 좋고 저렴한 수산물을 섭취하지 못한다며 강력한 대책 마련을 지시하였는데 이는 갓 잡은 생선을 냉동상태로 가지고 가던 수산물을 가공작업을 거쳐 수입해 가라는 것을 의미한다. 수산물 가공공장이 들어서면 일자리와 세금 수입이 동시에 증가해 극동지역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러시아는 세계 5위 규모의 수산강국임에도 글로벌 마켓에서 주요 수입국이라는 모순적인 위치에 있다. 그래서 극동지역에서 채취되는 각종 자원을 원자재 상태에서 가져가기보다는 가공 처리하는 공장을 세워 고용 창출과 러시아 국익 증진에 기여하는 국가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매년 양국 간 명태 쿼터 협상에서 러시아가 일관되게 요구하는 것은 명태를 잡아서 바로 가지고 갈 생각만 하지 말고 수산물 가공 공장을 건설하라는 것이다.

또한 러시아는 극동지역이 복합물류 네트워크 중심지로 거듭나도록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다. 극동을 교통물류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인프라 구축 및 활용에 한국이 적극 나서주기를 원하고 있다. 한국과는 TSR-TKR를 연결하여 극동 교통물류의 종축을 완성하고 중국과는 뿌리모리에 1, 2를 통해 횡축을 완성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또한 물류네트워크의 주요 거점인 항만 현대화를 통해 산업 클러스터와 물류망 연결을 완성하고자 한다. 이는 러시아가 극동개발을 통해 간절히 원하는 기본 인프라 구축과 산업발전을 통한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할 것이다. 러시아는 한국이 중국에 밀려 점차 글로벌 물류 운송망 네트워크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잃어가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와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참여를 종용하고 있다. 또 그렇게 되는 것이 러시아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36) 러시아의 야말 가스전 개발의 성공은 쇄빙기능을 가진 LNG 캐리어를 통해 아태 지역으로 수출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특수선박 제작에 있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한국 조선업체의 러시아 현지생산 시스템은 러시아의 북극 개발에 필수적인 사항이다.

<그림 1> 러시아 극동지역 선도개발 구역 위치



자료: 주블라디보스톡 대한민국 총영사관(2018) 『2018 선도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제도』, 2쪽.

거칠게 요약하자면 러시아는 자원판매시장과 기술보유국으로서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에너지 슈퍼링과 유라시아 물류망의 한 축으로서 기능하여 러시아를 에너지와 물류의 허브로 거듭나게 하여 강대국으로서의 확고한 위치를 가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또한 다가오는 북극개발과 연관된 조선산업 육성, 항만개발에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는 이 분야에서 러시아의 국익을 증대시키는 데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러시아의 협력 수요를 적극 활용하여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4.2. 한반도 신경제 완성의 중요한 이해관계자로서 역할 제고

러시아는 남북관계 개선, 남북러 3각 경협이 재개 등에 대한 기대감 속에 그간 한반도의 지정학적 변화를 계속 주시하였다. 푸틴정부는 일련의 정상회담을 우호적으로 평가하고³⁷⁾ 문재인정부가 가스관·철도·전력망 연결을 재추진

37) “러 크렘린궁, 남북 정상회담 결과 아주 긍정적 평가”, 『연합뉴스』, 2018.04.27; “러시아 "아주 성공적 남북정상회담... 누구도 방해해선 안돼"”, 『CBS 노컷뉴스』, 2018.09.19.

하겠다고 밝힌 것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1990년 수교 이후 지금까지 한러 관계는 외교관 맞추방 등 위기도 있었지만, 2014년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하는 등 도약의 전기도 마련한 바 있다. 양국 관계는 부침을 겪으면서도 2008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형성하는 등 전반적으로 잘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실질 내용에 있어서는 외교적 수사와 말로만의 성찬이 무성하고, 잠재력을 충분히 발현시키지 못하였다는 비판도 있다. 양국 간 협력의 성과를 좀 더 냉정하게 직시하면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실질적으로 내실화하지 못하는 등 기대만큼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한반도 정세 변화와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연계하여 협력을 추진하는 ‘협력국으로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푸틴정부는 사드 배치 반대, 북한체제 붕괴 방지, 평화체제 논의, 북·중·러 경협, 추가 도발 방지 등 중국과 공조가 가능한 부문에 있어 협력해 나가면서 동시에 남·북, 미·북 간 중재자적 역할도 적극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러시아는 북한의 5, 6차 핵실험과 잇단 미사일 도발에 대해 외교적으로는 대북 비판을 하고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도 찬성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과의 기존 우호관계를 지속해 나가려는 노력도 계속 펼쳐나갈 것이다. 최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북한과의 개발 협력이 강조될 경우, 러시아는 상황 변화에 따라 대북 소통 채널을 활용해 보다 적극적으로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중재하는 역할을 모색할 것이다. 이미 푸틴 대통령은 2016년 9월 동방경제포럼에서 “북한과 일정한 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있으며, 날카로운 대치 국면인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이를 이용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은 최근까지 계속 있었다.

우리로서는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등 남북한 안보 현안에 있어 러시아의 긍정적 역할 제고 및 양국 국민들의 상대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 증대, 역내 질서 재편과정에서 한·러 간 전략 협력을 보다 강화시켜 나가는 것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한러 관계는 눈으로 확인하고 손에 잡히는 양국 협력의 결실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현재의 복합적 한반도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는 길 가운데 하나는 역내 국제정세 변화와 함께 러시아의 중재자적 역할 제고 및 이의 활용을 통해 상호 윈-윈(win-win)의 시너지 효과를 살려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3. 러시아의 한반도 이해에 대한 인식 전환(paradigm shift) 제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러시아도 역내 정세변화에 부응하고 나름 변화된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 즉 과거 냉전기의 사회주의적 공감 이 심정적으로 잠재된 채 무조건적으로 북한을 지지하고 연민을 보이는 것은 이제 자제해야 한다. 진정으로 한리가 윈윈하고,³⁸⁾ 남북리가 3원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북한이 비핵화를 통해 진정으로 개혁, 개방으로 나아가는 길을 적극 도와야 한다.

보다 전향적으로는 유럽권에서의 대결 구도를 극동까지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별, 현안별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9·11 테러시 글로벌 가치의 추구라는 공통인식 속에서 미국과 협력을 했듯이, 극동과 한반도에서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미·러 간 협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비록 유럽권에서 대결 내지 갈등 구조를 나타낼지라도 극동지역에서는 이와는 다른 역내 중요한 행위자로서의 위상을 인정받고 미러관계 개선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일종의 극동과 유럽지역 간 ‘관계 성격’의 이중성 담보와 분리 전략인 셈이다. 역내 오랜 기간 펼쳐져 온 지정학적 대립 구도를 극복해 나갈 새로운 접근과 사고가 필요하다. 미·중·러, 한·러·일, 한·러·중 등 소다자 협력망을 다차원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것도 방안 중의 하나일 수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역내 다자안보포럼, 다자안보협력체에 대한 기반도 꾸준히 다져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결론

우리의 입장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즉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의 우호적 국제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러시아의 지지와 중재자적 지위는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푸틴 대통령이 한반도와 관련된 문제에서 밝힌 외교안보

38) 한리 전략적 협력의 당면과제와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신범식·하용출 외(2015) 『한국과 러시아의 전략협력』, 한국외대 지식출판원, 151-158쪽 참조.

독트린은 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러시아가 평화체제의 보장자, 동북아 갈등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 러시아의 중재자적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크기에 한반도 평화체제가 형성되는 과정과 그 이후 남·북·러 3각 협력에 대한 재추진은 탄력을 받을 것이다. 3각 협력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그간 북한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가 진행되어 3각 협력의 기초가 되는 자료들, 특히 북한과 관련된 기초적인 자료들이 부실하다는 점에서, 북한이 참여하는 남북러 3각 협력 프로젝트 공동조사와 타당성 검토 작업이 선행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동방경제포럼에 초청한 바 있으며,³⁹⁾ 이번 동방경제포럼에서는 성사되지 못했지만 금명 간 북·러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⁴⁰⁾ 이 시기를 이용하여 남북러 3각 협력에 대한 논의가 기초부터 다시 구성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3자가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동북아 협력과 관련된 GTI 등 여러 사안에서 러시아가 적극 참여하고 작은 공간에서라도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의 면을 넓히는 노력이 요구된다. 극동 부총리 유리 트루트네프의 재신임과 그의 업무 관장 범위가 극동뿐 아니라 북극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신경계 구상의 완성이 러시아 국익에 어떻게 부합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협력 사안들을 계속 발굴하는 노력이 이어질 필요가 있다. 이는 지금 펼쳐지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새로운 21세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구가라는 새로운 지형을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한·러가, 남·북·러가 상호 윈윈을 통해 함께 공영하는 길을 창출해 내길 기대해 본다.

39) “푸틴, 김정은에 오는 9월 방러 초청”, 『연합뉴스』, 2018.06.04.

40) “러 상원의장 ‘김정은 방러 의지... 북한, 미국과 단계적 실행 협의 중’”, 『SBS 뉴스』, 2018.09.08.

참고문헌

- 고재남(2017) 『제3기 푸틴정부의 신외교안보 전략과 실제』, 국립외교원 정책 연구시리즈(2016-16), 1-54쪽.
- 김성진(2018) 「러시아 안보정책의 변화」, 『슬라브학보』, 제33권 2호, 91-127쪽.
- 미헤예프, 바실리(2018) “푸틴 4기 러시아의 대외정책과 한반도”, 한국외대 강연 원고, 2018.03.20.
- 박정호·강부균·민지영(2017) 「러·일 경제관계 진전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17-19호.
- 서동주(2009) 「러시아의 동아시아 전략과 미래의 역할」, 『러시아의 미래와 한반도』, 고재남·엄구호 엮음, 파주: 한국학술정보, 347-386쪽.
- _____ (2018) 「2018 동방경제포럼: 러중일 정상 회동과 국제정치적 함의」, 『INSS Issue Brief 18-39』.
- 신범식(2013) 「푸틴 3기 러시아의 한반도정책: 변화하는 동북아에서의 적극적 역할 모색」, 『한국과 국제정치』, 제29권 제1호, 123-161쪽.
- _____·하용출 외(2015) 『한국과 러시아의 전략협력』, 한국외대 지식출판원.
- 양정훈(2018)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 소고와 전망 연구」, 『한국공공관리학보』, 제32권 제3호, 187-208쪽.
- 이상준·서동주(2017) 「한반도를 둘러싼 러시아의 인식과 입장」, 여시재 이슈브리프, 2017.06.15.
- 이선우(2018) “푸틴 4기의 출범 및 향후 러시아 정치체제의 진화 전망”, 평화재단 콜로키움, 2018.06.08, 발표자료, 1쪽.
- 장덕준(2015) 「‘신 푸틴 독트린’과 러시아 대외정책의 향방」, 『Russia Eurasia FOCUS』, 제304호.
- 장세호(2018) 「러시아 푸틴 집권 4기 대내외 정책방향」, 『INSS 전략보고』, 2018-02호.
- 주벨기에대사관(2016) “[에너지정책] 노드 스트림 2 프로젝트 관련 EU 집행위 입장”, 2016.05.04.
- 주블라디보스톡 대한민국 총영사관(2018) 『2018 선도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제도』.
- 홍완석(2001) 「푸틴시대 러시아의 신한반도 전략」, 『한국정치학회보』, 제35집 제3호, 343-363쪽.

- “러 상원의장 ‘김정은 방러 의지... 북한, 미국과 단계적 실행 협의 중’”, 『SBS 뉴스』, 2018.09.08.
- “러시아 석탄 北 거쳐 반입... ‘나진-하산 프로젝트’ 재추진되나(종합)”, 『연합 뉴스』, 2018.07.12.
- “러시아 “아주 성공적 남북정상회담... 누구도 방해해선 안돼””, 『CBS 노컷 뉴스』, 2018.09.19.
- “러 크렘린궁, 남북 정상회담 결과 아주 긍정적 평가”, 『연합뉴스』, 2018.04.27.
-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 전략과 과제”, 2018년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공동학술회의 자료집, 2018.05.11.
- “미 제재 경고 불구 ‘노드 스트림 2’ 가스관 공사 강행”, 『연합뉴스』, 2018.08.31.
- “신북방정책과 신동방정책: 현실적 접점 찾기”,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자료집, 2017.12.22.
- “아베 일 총리 ‘동방경제포럼’ 참석... “평화협정 진전 희망””, 『VOA 뉴스』, 2018.09.04.
- “유로-아틀란틱 공간에서의 러시아 대외정책”,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주최, 알렉세이 아르바토프, 나제즈다 아르바토프 초청 세미나 자료집, 2017.12.19.
- “2013 Eurasia Initiative: Global Cooperation in the Era of Eurasia(유라시아 시대의 국제협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최, 컨퍼런스 발표 자료집, 2013.10.18.
- “트럼프 대통령 ‘러시아, G7 회의에 다시 복귀해야’(종합)”, 『연합뉴스』, 2018.06.08.
- “푸틴, 김정은에 오는 9월 방러 초청”, 『연합뉴스』, 2018.06.04.
- “푸틴 “남북통일, 평화적 방법이면 지지””, 『중앙일보』, 2013.11.13.
- ““한·러 협의회’ 출범... ‘9-브릿지’ 사업 협의채널 가동”, 『연합뉴스』, 2018.03.05.
- KOTRA(2018) 『2016/17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산업·무역 정책자문. 러시아 연해주: 루스키섬 개발 전략 및 투자 유치 방안』, <http://www.ksp.go.kr/kr/publication/policy.jsp?syear=&snat=&skey=&stem=&stype=&pg=1&idx=15086> (검색일: 2018.09.25).

“Военная доктрин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утверждена Президенто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5 декабря 2014 г., № Пр-2976), *Совет Безопасности РФ*, <http://www.scrf.gov.ru/security/military/document129/> (검색일: 2018.09.17).

“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Утверждена Президенто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В. Путиным 30 ноября 2016 г. *Совет Безопасности РФ*, <http://www.scrf.gov.ru/security/international/document25/>(검색일: 2018.09.17).

“После Президента Федеральному Собранию”,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2018.03.01, <http://www.kremlin.ru/events/president/transcripts/messages/56957>(검색일: 2018.09.25).

“Президент подписал Указ «О национальных целях и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задачах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24 года»”, 2018.05.07,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http://kremlin.ru/acts/news/57425>(검색일: 2018.08.20).

“Результаты выборов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становление № 152/1255-7, *ЦИК России*, 2018.03.23, <http://old.cikrf.ru/analog/prezidentskiye-vybory-2018/itogi-golosovaniya/>(검색일: 2018.09.03).

Российский Институт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www.riss.ru

“Россия и меняющийся мир”, *Московские Новости*, 2012.02.27.

“Стратег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утв. Указом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31 декабря 2015 г. N 683), *Совет Безопасности РФ*, <http://www.scrf.gov.ru/security/docs/document133/>(검색일: 2018.09.17).

Фрадков, М. Е.(2017) “Директор РИСИ М.Е. Фрадков о выборах президента Южной Кореи”, *РИСИ*, 2017.05.09, <https://riss.ru/events/40707/>(검색일: 2017.07.16).

“Eastern Economic Forum,” *President of Russia*, 2016.09.03, (푸틴 제2차 동방 경제포럼 기조연설문), <http://en.kremlin.ru/events/president/news/52808>(검색일: 2018.09.25).

Fedorove, Gleb(2017) “TPP failure: Can Vietnam become Russia’s window to Asia?,” *Russia Beyond*, 2017.01.17, https://www.rbth.com/business/2017/01/31/tpp-failure-can-vietnam-become-russias-window-to-asia_692768(검색일: 2018.09.25).

2018.05.20).

Kuznetsova, Anna(2017) “Greater Eurasia: Perceptions from Russia, the European Union, and China,” *RIAC*, 2017.09.01, <http://russiancouncil.ru/en/analytcs-and-comments/analytcs/greater-eurasia-perceptions-from-russia-the-european-union-and-china/>(검색일: 2018.05.30).

SIPRI(2017) *SIPRI Yearbook 2017*,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Trenin, Dmitri(2015) “From Greater Europe to Greater Asia? The Sino-Russian Entente,” *Carnegie Moscow Center*, 2015.04.09, <http://carnegie.ru/2015/04/09/from-greater-europe-to-greater-asia-sino-russian-entente-pub-59728> (검색일: 2018.05.20).



Abstract**Northeast Asian and Korean Peninsula Policy of Putin's 4th Presidential Term, and Main Tasks of Korea-Russia Diplomacy and Economic Cooperation****Suh, Dong Joo* · Lee, Sang Jo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erception of Russia in North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in the 4th presidential term of Putin, and to propose measures to improve the diplomatic an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ROK and Russia. We would like to emphasize geo-political as well as geo-economic aspects, that will help to build a new order in the Korean Peninsula. Interests in the new economic initiative of Korean peninsula has increased as increase in possibility of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its willingness to open policy. In this regards, the link betwee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Russian Far East should be pursued from a long-term perspective. The policy on 3-lateral economic cooperation should proceed from the perspective of continuously promoting the change of inter-Korean relations and enhancing the role of Russia as an arbitrator and a mediator for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Russia is seeking for a hub country of energy and logistics with the cooperation of bith Koreaes. Considering the new eastern policy of Russia, the joint feasibility study of the 3-lateral cooperations among ROK, DPRK, and Russia should be pursued in a proactive basis.

Key words: Putin, Russia, New Eastern Policy, New Northern Policy, New Economic Initiative of Korean Peninsula, ROK-DPRK-Russia 3-lateral Economic Cooperation, East Economic Forum

* Senior Research Fellow in the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Eurasian Studies at Kookmin University.

서 동 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연세대 정치학 박사. 관심 연구 영역은 유라시아 국제질서, 러시아의 정치외교, 한러관계 부문이다. 저서로 『러시아 현대정당사』가 있으며, 공저 및 최근 논문으로 『몽골지역연구』, 『한러협력 2030 청사진』, 『한국과 러시아의 전략협력』, 『푸틴시대의 러시아』, 『현대 러시아의 해부』, 『한국외교 2020 어디로 가야하나?』, 『한미중 삼각구도에서 러시아의 역할과 의미』, 『동아시아-한반도 안보정세와 한러관계』 등이 있다.

이 상 준

국민대학교 유라시아학과 교수. 러시아과학아카데미 IMEMO 경제학 박사. 관심 연구 영역은 러시아 및 포스트 소비에트 유라시아 국가 경제 등이다. 최근 논문으로는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구심력과 원심력: 에너지, 교역 및 투자를 중심으로」, 「러시아 권위주의 시장경제의 발전과 국제자본의 역할」, 「국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어야 하는가? 모스크바 시민들의 국가에 대한 기대」 등이 있다.

Suh, Dong Joo

Ph.D. in Political Science of Yonsei University. Currently Senior Research Fellow in the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His main research area is Russian Politics and Diplomacy, Eurasian International Order and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Russia. His recent books and articles include *A History of Russian contemporary political party*, *South Korean-Russian Strategic Cooperation*, *Russia in the Era of Putin*, "Russia's Role in the ROK-US-China's Trilateral Dynamics" and so on.

Lee, Sang Joon

Ph.D. in Economics, Institute of World Econom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MEMO), RAS. Currently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Eurasian Studies at Kookmin University. His main research area is Russian and Eurasian Economy. His recent articles include “Centripetal and Centrifugal Forces of Eurasian Economic Union: Focused on the Energy, Trade, and Investment,” “The Role of Foreign Capital in the Development of Authoritarian Market Economy in Russia,” and “What Should the State Do to Us? Expectations of Moscow Citizens toward the State.”



논문심사일정

논문투고일:	2018. 9. 27
논문심사일:	2018. 10. 15 ~ 2018. 10. 29
심사완료일:	2018. 10. 30